

최근 역사학과 독도령 유권문제를 둘러싼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일마전 일본당국은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과거 군함도(하시마섬) 등에서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동원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는 거짓증언자료들을 진시해놓고 개방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한편 일본의무성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1905년 이전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벌려왔다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마치 독도가 오래전부터 저들의 영토인 것처럼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공개하겠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령토》라는데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것이다. 그것을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심어주

# 삼나라의 철면피성

지금 온 겨레는 강제징용과 독도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교과책동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조선강점시기 저들의 범죄적인 침략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강제동원, 랍치, 유폐하였다.

일제의 만행에 의해 강제징용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으며 참기 어려운 고역을 치르고 종당에는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도 못하고 무주고혼이 되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거나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돌아왔다. 군함도가 바로 과거 일제가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죽음의 고역장들에 강제로 끌고가 가장 야수적이고 살인적인 방법으로 노예로동을 강요한 죄행을 고발하는 수많은 력사의 증언자, 성도장들중의 하나이다.

천인공노할 죄악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배상하는것은 마땅한것이다.

그런데도 일본당국은 강제노동은 아니었다. 임금지급을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로 동이었다는 억지주장을 해대며 과거죄악을 덮어버리고 철면피하게 놀아내고있다.

강제징용범죄를 정당화하는 놀음을 벌려놓은 일본당국의 망동은 삼나라족속들이 아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철면피하고 오만방자한 무리이 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집중도 낮을 불행 국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낄 대신 오히려 정당화해나선 일본과 같은 나라라는 아마 지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독도가 조선의 고유한 력자료라는것은 이미 력사적 사실과 더불어 지리적 및 법률적 근거에 의해 충분히 확증되었다.

일본에서도 증빙자료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2018년에 독도와 울릉도의 소속이 《조선》으로 명백하게 표기된 《일본력사지도》와 《신원일본력사지도》가 공개된 사실이 이를 뚜렷히 실증해주고있다.

이 지도들은 1914년부터 30여년간 일본 궁내성 도서

로(왕실도서, 기록보관과 실록편찬을 담당하는 기관) 편수관으로 종사하면서 왕실력사연구를 해온 시바 가즈모리가 1927년과 1931년에 제작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제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황당한 동영상자료까지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은 일본당국의 영토강탈야욕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과거에 일제가 조선사람들에 대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던것은 오늘도 그 후예들이 조상들의 죄악에 찬 력사를 딛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고 미쳐달뛰고있는것이다.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력사교과책동과 독도강탈야망은 천년속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증오와 복수심만을 더욱더 끓어번지게 하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 아직도 독을 쓰는 《보안법》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이 여전히 독을 쓰고 있다.

일마전 남조선대법원이 6.15공통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청학련대》) 전 간부들을 《보안법》위반에 걸려 징역형을 들춰냈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들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에나 있을수 있는 반민족적범죄위로서 남조선에서 진보적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의 《보안법》은 구시대적 대 표하는 반통일악법이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파쇼악법이다.

그런데 리명박파쇼 《정권》은 지난 2011년 《청학련대》를 《북체제를 찬양한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보안법》위반에 걸려 기소하였다.

그런데 리명박파쇼 《정권》은 지난 2011년 《청학련대》를 《북체제를 찬양한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던 끝에 《보안법》위반에 걸려 기소하였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오

늘 이들에게 징역형이 가해진것은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린 애국청년들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파쇼적폭거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에나 있을수 있는 반민족적범죄위로서 남조선에서 진보적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의 《보안법》은 구시대적 대 표하는 반통일악법이고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파쇼악법이다.

세상에 출현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 반통일세력의 민족분열적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어 온 《보안법》은 세계에서

본사기자 박철남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혁신》의 간판밑에 정강정책을 개정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리유민족 지난 선거에서 참패당한것은 극우보수분자들과 그들의 주장을 전면에서 내세운것과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8월중에 기존의 정강정책에 독립운동의 력사와 정신, 립시정부의 활동내용 등을 포함시켜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것이

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진보보다 더 진취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4.19민주화운동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초월투쟁정신, 로동권확보와 같은 진보정당들의 주요 정책내용들까지 반영하겠다고 선택하고있다 한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적폐오물들의 교활한 민심사기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보수패당이 민심의 배척을 받을 때마다 늘상 《베아른 반성》, 《환골탈퇴》, 《혁신》에 대하여 끝날 떠들어대었지만 실

지로 달라진것은 취불도 없었다는것이 세간의 한결같은 평이다.

승냥이가 양을음소리를 낸다고 양이 될수 없듯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민적약정과 부정부패로 썩들대로 썩든 보수패당의 정

파괴정역도의 《유신》독재시기 역시 초보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참히 유린당할된 암흑의 시대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선 광주민중들을 《독도》로 몰아 퍼버린내나는 살륙전을

경행한 전두환역도의 집권시기는 또 어땠겠는가. 외세에게는 아부굴종하고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쇼악법들을 무수히 무어내며 집권 전기간 반역행위를 일삼아온것으로 하여 《태어나서 처음 안된 정권》으로 저주와 탄압을 받았다. 그뒤를 이은 보수 《정권》들역시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 않았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러한 《보수》의 색은 늘에서 두번처럼 살아온 《미래통합당》이라고 달리 될수 있겠는가.

광주민중기를 《독도들

의 란동》으로 모독하는 등 지난 보수 《정권》시기의 범죄자들을 극구 비호둔둔하고 박근해역도의 반인민적정책으로 말미암아 수백명의 나 어린 학생들이 꽃망울도 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세월》호참사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꿰뚫기 등은 보수패당의 추악한 본심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런데 속검은자 비단보자기 뒤집어쓴다고 이제 와서 《독립운동의 력사와 정신》, 《진취적인 진보》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니 낮가죽이 꿈의 발바닥보다 더 두꺼운 수작질이라 해야 할것이다.

하지만 오라니 광고한다고 해서 누구나 믿는게 아니다. 남조선의 민심은 《미래통합당》의 더러운 속심을 알아도 너무 잘 알고있다.

보수패당이 벌려놓고있는 《혁신》놀음을 두고 《더러운 개수작》,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난다》는 남조선 각 계층의 목소리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김영범

당한 차별행위에 맞서 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총련과 일본의 지방자치체들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요구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반대하고있다.

총련인근들과 재일동포들은 지난해 조선학교 유치반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 적용에서 제외된 이후 문제

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일본 지방자치체들과의 련대활동도 적극 벌려왔다.

결과 6월 26일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국인학교유치반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 적폐검찰의 단말마적발악

남조선에서 일련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사이의 아귀다툼이 그칠새없이 벌어지고있다 한다.

전 《국무총리》한명숙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재조사문제와 검찰총장의 측근인물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간에 벌어진 싸움일지 그 하나이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남조선의 언론들은 전 《국무총리》한명숙의 부정부패사건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폭로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법무부는 전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장관의 지시로 하달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진보개혁세력들을 물어매치기 위해 비렬하고 음모적인 방법으로 뒤조사를 벌리던 검찰총장의 측근인물과 어느 한 언론사 기자의 불법행위인 《검찰과 언론유착》의 의혹사건을 수사할

데 대한 지지도 내리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조선검찰은 수사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있다.

반면에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되면 저들이 지난 시기에 파쇼권력을 휘두르며 감행한 온갖 범죄고 있다고 성토했면서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부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놓고서도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이 적폐중의 적폐라고 하면서 7월중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 처장후보자추천을 마

무리하려 하고있다. 《미래통합당》과 검찰이 이러저러한 구실로 이를 막아나서는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있다.

반면에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되면 저들이 지난 시기에 파쇼권력을 휘두르며 감행한 온갖 범죄고 있다고 성토했면서 검찰이 법무부의 지시에 부응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 놓고서도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대립과 마찰이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지금 법무부는 검찰이 적폐중의 적폐라고 하면서 7월중에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와 처장후보자추천을 마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검찰총장이 민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무슨 수사의 독자성을 내흔들며 법무부와 충돌하고있는 실태를 보며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는 《윤석열이 당국에 맞서는것은 보수세력들의 지지를 얻어 대선후 보자리를 차지하기 위하는 것이다》라고 평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다고 한다.

한편 입에 문 뼈다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승냥이처럼 저들의 파쇼적인 독재권력을 한사코 유지하려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남조선민심은 공정한 법을 지키는 법관이나 나라적폐세력의 법수인이 되어 그들의 대변인 노릇하는 검찰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차별책동 단죄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항의하는 금요행동이 일본본부과학성앞에서 진행되었다.

《COVID-19》확대와 관련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을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규탄하여 전개된 투쟁에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 재일동포들, 일본인

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학교지원제도와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나 어린 유치반 아이들을 배제한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전염병사태에 대처한 학생지원금지불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차별책동을 규탄하여 전개된 투쟁에 위를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말라!》,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본당국의 부

# 총련과 일본의 지방자치체들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적용을 요구

조선학교 유치반들에 대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일본의 지방자치체들이 반대하고있다.

총련인근들과 재일동포들은 지난해 조선학교 유치반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 적용에서 제외된 이후 문제

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일본 지방자치체들과의 련대활동도 적극 벌려왔다.

결과 6월 26일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외국인학교유치반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외국인학교 유치반에 다니며 다카라즈카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지원을 보장할것을 요구한 《청원》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다카라즈카시민의 회》, 《효고현외국인학교협의회》 등 17개 단체가 련명으로 제출한것이다.

한편 가나가와현 가와사기시당국도 6월 일본정부에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모든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지원대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본사기자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비용은 오염을 유발한 주한미군이 책임지라》

남조선에서 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울려나오고있다.

인천지역 환경,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추진대책위원회》는 7일 부평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주 《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이날 인천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정의를 바로세우고 환경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을 오염을 유발한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의 아직 반환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면 1천억원이 넘는 오염정화비용이 들것이라고 하면서 미군기지의 토양정화비용을 남조선주민이 부담할것을 요구해나갔다.

본사기자

#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한 야만의 무리

되었다. 악착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징용》으로 끌어가기 위해 강제련행, 랍치, 유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말그대로 집중사냥을 련상케 하는것이였다. 일제는 내탕에 마을을 달려들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랍치, 강제련행하였는가 하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 길가던 사람, 지어 잠자던 사람들까지 강압적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강제련행, 랍치된 조선사람들은 조선군대 각지와 일본렬도, 남양군도, 필리핀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강제로동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을 집중보다 못한 취급을 하였다.

악독한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전갱터에 내몰아 총알받이로 써먹었다는 하만 란광, 광산, 군수공장, 군사시설물 공사장에서 가혹한 노예로

동을 강요하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1945년 자료만 놓고보더라도 거기에는 당시 일본 전국에 있었던 549곳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강제로동력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되어 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고향을 찢내면서도 그들의 로동안건과 생활조건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차례것이란 고작해서 보잘것없는 보리밥 한덩어리에 밀진 소금국이 전부였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하루 14-16시간 지어 20시간 이상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만큼은 그야말로 피눈물의 고역장, 죽음의 생지옥이였다.

강제로동으로 고역을 당하는 조선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일본사람인 쇼지 노베는 이에 대해 《조선사람들은 노예들이였다. 그에 비하면 죄인은 도리어 편

안하였다. 밀차를 두명이 미는 데 뒤에는 동동이를 든 감독이 따라다니 푸지 않으면 매질을 했다.

나는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말도 그렇게까지는 데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일제교형리들은 강제로동판에서 먹지 못하고 기력이 약하여 쓰러지는 조선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체적으로 후려치고 구두발로 사정없이 걸어차며 몽둥이로 때려죽이였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로동 안전보호시설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로동채로 무리로 생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벌어졌다.

오죽하였으면 《침묵 1대에 조선사람 1명》, 《석란한삼에 피 한방울》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일제가 조선식민지통치기간에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과 소년들, 녀성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강제로동피해 생존자들과 령혼들이 오늘날 일본의 과거죄악을 피러지게 절규하고 있다.

일본당국은 과거에 저지른 특대형조선인강제로동죄악에 대해 용당한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본사기자 한복순

이제에 의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는 조선소년들

